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7월 5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07면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 설명회	1
江原日報	12면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기업 유치 속도	1
강원도민일보	13면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예타통과 속도	2
江原日報	03면	도의회 방학전 마지막 회기 자치도 출범후 첫 도정질문	3
강원도민일보	03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반쪽'... 시·군청 전출입 여전	4
江原日報	14면	"동해항 경쟁력 강화 최선"	5
江原日報	14면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6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평창지역 다함께돌봄센터 4호 진부점 개점	7
江原日報	11면	‘문화관광도시 황성’ 비전 선포	8
강원도민일보	15면	[동정] 최규만(황성) 도의원	9
강원도민일보	12면	[동정] 전찬성(원주) 도의원	9
강원도민일보	18면	[동정] 김일용 고성군의장,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9
강원도민일보	18면	[동정] 김시성(속초·위 왼쪽)·원미희(비례) 도의원	9
강원도민일보	01면	GTX-B 춘천 연장 발표 초읽기...내년 착공 되나	10
江原日報	02면	강원청소년올림픽 ‘G-200’ 본격 붐업	11
江原日報	01면	예타 면제 후 4년, 첫 삼도 못 뜬 제2경춘국도	12
江原日報	01면	道, 교부세 1,307억 감소 전망 재정자립도 낮은 시·군 직격...	13
江原日報	02면	道, 교부세 1,307억 감소 전망 재정자립도 낮은 시·군 직격...	14
강원도민일보	04면	여전히 남아있는 '석면 학교'... 도교육청 관리부실 비판	14
江原日報	02면	동해항에 컨테이너선 정기항로 개설	15
강원도민일보	05면	동해안 미개장 해변 수난사고 속출 시·군 안전요원 배치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한국형 자치분권 모델 만들어야	1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피서철 안전사고 충분한 예방책을	17
江原日報	19면	[사설]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성과를 내야 한다	18
江原日報	19면	[사설] 여행 만족도 4위 그친 강원관광, 경쟁력 강화해야	19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 설명회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 설명회가 4일 KIST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에서 김홍규 강릉시장, 권혁열 도의장, 김기용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윤인재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국장 등 국내 바이오 관련 기업 대표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관련기사 12면 강릉=권태명기자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기업 유치 속도

설명회 열고 입주 장점 홍보
시 “핵심 앵커 기업 들일 것”

【강릉】강릉시가 성공적인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관건인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본격적인 기업 유치에 나선다.

시는 4일 KIST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에서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위한 첫 번째 설명회를 열고 관련 기업을 상대로 강릉 국가산단 입주의 장점을 적극 홍보했다.

이날 설명회는 올 5월 현안회의 때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이 국가산단 지정 승인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데에 따른 것이다.

설명회를 통해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조성(안) 및 강릉의 투자 여건,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활성화 전략, 기업지원제도 안내 등 정확한 투자정보를 설명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상담도 진행했다.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우수한

교육기관(5개 대학)과 연구기관(6개 기관) 등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점, 수도권과 1시간대의 입체 교통망,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쾌적한 생활환경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인센티브, 세제지원 혜택 등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투자 상담, 기업방문, 박람회 참가 등 전략적 홍보를 전개해 국내 여러 바이오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강릉 국가산단을 이끌어 갈 핵심 앵커 기업을 4개 이상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김홍규 시장은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항만 개발과 연계해 환동해권 물류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업 맞춤형 지원 제도를 발굴하고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yj5000@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07 05 ()

13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예타통과 속도

시 첫 공동 기업유치 설명회
정부차원 지원 약속 후속 조치
기업 방문·투자 상담 등 지속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선정된 강릉시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첫 기업유치 설명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한국토지공사(LH)는 4일 KIST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에서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홍규 시장, 권혁열 도의장, 김기영 시의장, 김기용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윤인재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국장을 비롯한 국내바이오관련 기업대표 등 150여



국토교통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한국토지공사(LH)는 4일 KIST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에서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지난 5월 강릉을 방문, 정부차원의 지원 약속에 이은 후속 조치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특히 산업통상

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KIST강릉분원천연물연구소,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 바이오관련 기관·기업 등이 후

원 단체로 나서며 실질적인 설명회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비롯해 바이오와 관련한 KIST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등 우수연구기관, 대학, 수도권과 접근 교통망, 쾌적한 생활환경, 다양한 세제혜택 지원 등을 홍보했다.

시는 이번 기업 설명회에 이어 앵커기업 4개 이상과 관련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방문, 투자상담, 박람회 참가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국가산업단에 유치해 기업들에게 취득세 면제 등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기업 맞춤형 지원 제도를 발굴하고 기업 우수인력들이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江原日報

2023 07 05 ()

03

도의회 방학전 마지막 회기 자치도 출범후 첫 도정질문

10일부터 제321회 임시회 교육·현안 송곳 질문 예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10일부터 ‘여름방학’ 전 마지막 회기에 돌입, 도내 현안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제321회 임시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처음 도정질문이 마련된 만큼, 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도의원들은 김진태 지사 도정 1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강원자치도 인구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겠다고 예고했다. 또 장애인 재취업을 위한 지원,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된 강원외고, 강원지역 업체 물품 우선 사용 등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10일 열리는 제1차 의회운영위에서는 의원들 간 이견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도의회 시·군 상담소를 도내 시·군에 설치해 도민 건의사항과 고충 민원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견이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회기에는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한국여성수련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은 4일 현재 이무철(국민의힘·춘천) 의원과 지광천(국민의힘·평창) 의원이 뜻을 밝힌 상태다.

이밖에도 ‘강원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등 민생 조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접경지역 개발촉진 지원 특별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등 특위도 움직인다. 이번 임시회는 21일까지 12일간 이어지며 다음 달은 회기가 없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7 05 ()
0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반쪽’... 시·군청 전출입 여전

시행 1년 6개월 ‘실효성’ 논란
기형적 구조·인력풀 한계 봉착
시행초 인사교류 불가피 지적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지난해 1월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됐지만 일부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시·군청 전출·입을 통해 인사를 단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인건비 등은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남아있는 기형적 구조가 여전한 데다 의회 차원의 인력풀의 한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춘천시의회의 경우 춘천시에서 공로 연수까지 6개월 남은 과장급을 의회로 전입해 사무국장으로 승진시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의회 내부 의견이 분분하다. 춘천시는 지난 3일 연말 공로 연수 예정인 사무관을 춘천시의회로 전출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해당 사무관은 신입 춘천시의회 사무국장이 유력하다. 춘천시의회는 지난해 말에도 자체승진 대신 춘천시 전입으로 사무국장직을 채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원들을 중심으로 동요하는 상황이다. 춘천시의회 A 의원은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만큼 자체승진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나 역량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진호 춘천시의장은 “인력풀이 협소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며 본청과의 교류, 경쟁 등을 통해 역량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7월 인사에서 사무처장이 교체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인사가 단행될 경우 권혁열 의장 체제 이후 세 번째다. 사무처장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파견되면서 의회

의 독립성이 저하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지난 5월에는 상반기 정기인사 4개월만에 공보기획팀장과 경리팀장을 맞교체하고, 모 과장은 전례없는 직책인 도청 의회협력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상황도 이어졌다.

반면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인사교류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원주시의회는 시청 파견이 아닌 의회 소속으로 직원이 100% 충원될 때까지 원주시 정기인사와 맞물려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시의회 인력풀이 적어 의회 소속 직원들만 승진될 경우 시

청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상대적 박탈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양양군의회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하위직 직원들의 연차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최대 5년 정도는 5급 2명과 6급 2-3명을 본청에서 파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양구군의회도 의회사무과장과 수석전문위원 등 5급 2명과 일반직원 2명 등 총 4명의 파견이 유지되고 있다.

김일웅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고성군의회)은 “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선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체 예산편성 등 재정권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총합

江原日報

2023 07 05 ()

14

“동해항 경쟁력 강화 최선”

동해시

북방진출 관문·요충지
물류 중심지 위상 확립

동해시는 강원특별법 개정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지정
에 관한 특례’를 활용해 동해
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완성
해 나가기로 했다.

4일 동해시평생학습센터에
서 열린 찾아가는 강원특별자
치도 도민설명회에서 김규하
동해부시장은 ‘강원특별법 특
례 활용 동해시 발전전략’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동해항은
강원자치도 유일의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북방교역 및 동북
아 물류거점으로 지정학적 최
고의 입지라고 설명했다.

또 북평산업단지, 송정일반
산업단지, 산단형 자유무역지
역 등 자유무역지역으로서 최
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으
며 북한, 동북3성, 러시아 극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4일 동해시평생학습센터에
서 김명선 행정부지사, 심규언 시장, 이동호 시의장, 최명관 부의장, 도·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동지역 등 북방진출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관문이라고 강조
했다.

시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한 단계별 발전전략으로 동
해항의 스마트 항만화 및 물
류기능 확충을 통한 항만경쟁
력 강화(단기), 강원자치도와
북방경제권 간의 물류, 통상
거점 루트 확보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중기), 환동해권
산업 및 물류 중심지로서의
위상 확립 및 경쟁력 강화(장
기)를 제시했다.

김명선 강원자치도 행정부
지사도 “항만형 자유무역지
역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 동
해항의 지정이 가능하다”며
“관세, 조세, 부담금 면제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해 동
해항을 북방교역 중심항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심규언 시
장, 이동호 시의장과 최명관
부의장, 정동수·김향정·민귀
희 시의원, 최재석·김기하·유
순옥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동해=정익기기자

江原日報

2023 07 05 ()

14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삼척시

과학단지 실전 방안 밝혀
체육시설 확충 등 강조

삼척시가 강원자치도특별법 특례 활용을 통한 발전전략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산림이용진흥지구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는 미래산업 기반 확충 및 문화·관광도시 육성, 정주도시 실현을 위해 기업 등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삼척시의 필수전략과 맞물려 있다.

시는 4일 시청에서 열린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에서 첨단과학기술단지 특례와 관련, 수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 인력 양성(강원대,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학과 개설), 연구 지원(창업지원 등), 산업단지 조성 등 실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4일 삼척시청에서 김명선 행정부지사, 박상수 시장, 정정순 시의장과 심영곤 도의회 운영위원장과 도의원, 시의원,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천방안을 밝혔다.

이어 삼척시 595.4ha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를 활용,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해 교동지역에 집중 배치돼 수요 대비 인프라가 한계에 도달해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농업 6차 산업화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또 전체 면적의 8%를 차지하는 산림을 활용하는 산

림이용진흥지구 특례를 이용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환경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제시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권한과 지위를 잘 행사해 특별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박상수 시장은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법적 권한이 주어진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로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삼척=황만진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7 05 ()

평창지역 다함께돌봄센터 4호 진부점 개점

신현태

초교생 방과후 상시·일시돌봄 지원



▲ 평창지역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인 진부점이 4일 개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평창지역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인 진부점이 4일 오후 심재국 군수, 심현정 군의장과 군의원, 최종수 도의원, 지역의 각급 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점식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점식을 가진 진부점은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대표 남광봉)이 운영하고 있는 연꽃어린이집 2층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했고 월정사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을 맡아 지역내 초교생의 방과후 상시·일시돌봄, 급·간식지원, 학습·활동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역내 다함께돌봄센터는 봉평, 평창, 대화점에 이어 진부점까지 모두 4곳이 운영되고 있다. 신현태

sht9204@kado.net

江原日報

2023 07 05 ()

11

‘문화관광도시 황성’ 비전 선포

황성문화관광재단 개소식
4대 핵심 전략 목표 세워

【황성】지역 문화관광 활력을 위해 4대 핵심 전략이 추진된다.

황성문화관광재단은 4일 김명기 군수, 김영숙 군의장과 군의원, 한창수·최규만 도의원, 강옥희 강원특별자치도관광재단 대표, 김경녀 황성교육장, 엄경익 황성축협 조합장, 우광수 황성문화원장, 정재영 황성예총 회장, 한국관광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 개소식과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재단은 모두가 행복한 힐링 문화관광도시 황성이라는 새 비전을 선포해 황성의 새로운 문화관광의 허브로서 변화를 선도하기로 했다.

또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향



◇황성문화관광재단은 4일 재단 개소식과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유 기회 확대’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객 유치 강화’ ‘문화관광도시 인지도 제고 및 문화관광생태계 활성화’ ‘지속가능 경영혁신체계 강화’ 등 4가지 전략 목표를 세웠다.

황성문화관광재단은 기존 ‘문화예술’ 영역에서 ‘문화관광’으로 관광 진흥을 포함하는 기능을 확대했다.

조직도 경영기획팀, 문화사업팀 등 2개 팀에서 ‘관광사업

팀’과 ‘축제운영팀’을 신설해 모두 4개 팀으로 늘렸다.

이재성 대표는 “개소식은 조직 개편과 사무실 이전을 통해 새롭게 도전하는 황성문화관광재단의 첫걸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라며 “앞으로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은 물론 황성의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황성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삶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유학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7 05 ()
15최규만(형
성) 도의원
은 5일 낮
12시 서울
특별시의회에서 열리는 전국 공
항소음대책 특별위원
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7 05 ()
12전찬성(원
주) 도의원
은 5일 오
전 10시 원
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리는 2023
년 농촌여성 건강수련
대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7 05 ()
18김일용 고
성군의장
(위 왼쪽)
김용복(고
성·위 오른쪽) 도의회 농림수
산위원장·이지영(비
례) 도의원은 5일 오후
2시 군청에서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도민
설명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7 05 ()
18김시성(속초·위 원
쪽)·원미희(비례) 도
의원은 5일 오전 10시
속초문화예술회관에
서 열리는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도민
설명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7 05 ()
01

GTX-B 춘천 연장 발표 초읽기...내년 착공 되나

국토부 이달 중 용역결과 공개
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예정
도·춘천시 620억원 부담 입장
윤 대통령·김진태 지사 공약



정부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연장·신설연구역이 이달 중 발표예정인 가운데 GTX-B 춘천 연장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원도와 춘천시는 4300억원에 이르는 연장비용 중 620억원에 이르는 강원도 몫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사가 조기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해당 연구용역을 통해 GTX 노선의 연장·신설 등의 사업 타당성을 따져 최종 확충 노선안을 도출한 뒤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2026년~2035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의 대표 SOC사업인 GTX-B 노선 춘천 연장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대표 SOC 공약이자, 김진태 도지사의 공약이다.

당초, 인천대입구~남양주마석 구간으로 예정되어 있던 GTX-B 노선의 종점을 마석역에서 춘천역까지 55.7km 연장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2024년 착공, 2030년 개통이 목표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춘천역에서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55분, 용산역까지 63분, 인천 송도까지 9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 ITX-청춘 열차보다 춘천역~용산역 소요 시간이 17분 단축되고, 서울역, 여의도, 신도림 등 서울 주요 도심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김지사는 지난 5월 강릉 시청에서 열린 강원도-국토교통부 지역현안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GTX-B 춘천 연장을 국가철도망 사업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GTX-B 춘천 연장 사업은 기존 확정 노선과 동일하게 하루 92회 운행시 총 사업비는 43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가철도망 사업에 포함돼야만 국비 약 7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종 발표를 앞두고 경기도와 강원도의 부담비율과 철도기지 건설 비용, GTX-B 신설에 따른 기존 ITX, 춘천~속초철도 운행횟수 조정 등 적지 않은 난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구간은 B/C(비용편익분석)가 1.0 이상으로 예상되는데다 강원도가 620억원에 이르는 강원도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은 물론 내년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TX 관련 연구용역은 E노선까지 연계되면서 경제성이 특히 중요하게 평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관계자는 “이 사업구간은 B/C가 1.0 이상 나와서 최근에 나온 사업 가운데 경제성이 비교적 높다고 한다”며 “향후 춘천시와 협력해 나가면서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세훈·김덕형

江原日報

2023 07 05 ()
02

강원청소년올림픽 'G-200' 본격 붐업

내일 지속가능 올림픽 선포식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G-200일인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대회 붐업을 위한 유니폼, 메달 공개 및 지속가능 올림픽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진중오, 이상화 공동 조직위원장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심재국 평창군수, 유승민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주요 내빈이 참석한다.

또 홍보대사인 피겨여제 김연아를

비롯, 김주원, 윤성빈, 최민정, 박재민, 김예리, 선우예권과 탤런트 박선영, 쇼트트랙 박윤기 선수가 참석해 행사를 빛낼 예정이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주인공들인 봅슬레이 유망주 소재환 선수와 조윤선 청소년 서포터즈도 특별히 초청해 자리를 함께 한다.

조직위 관계자는 “유니폼·메달 공개 및 지속가능 올림픽 선포식 등 대회 붐업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청소년올림픽대회 열기를 확산시키고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이무현기자

江原日報

2023 07 05 ()

01

예타 면제 후 4년, 첫 삽도 못 뜬 제2경춘국도

연내 실시설계 완료 예정 불구
사업비 부족 시공사 선정 표류
경기도 노선 갈등 재현도 발목
내년 상반기 착공 차질 불가피

2019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받은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이 4년6개월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업비 부족에 설계 완료를 앞두고 경기지역의 반발도 거세져

또다시 사업 지연 위기에 놓였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제2경춘국도는 올 하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춘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노선 등에 대한 설명회도 열린다. 설계를 마치면 시공사 선정만 남게 된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과 착공이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1조2,862억원으로 책정된 제2경춘국도의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2경춘국도는 당초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턴

키)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지난해 사업을 맡겠다는 업체가 없어 연쇄 유찰 사태를 겪었다. 2019년 확정된 사업비가 물가 인상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적자 시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초 2023년 착공 계획이 미뤄졌다. 이에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올 초 간신히 설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업비 증액 없이는 또다시 시공사 유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강원자치도, 원주국토청은 사업비 증액을 논의 중이나 사업비 부족분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까지 맞물려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욱이 경기지역에서는 해묵은 '노선 갈등'까지 불거져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경기 가평 구간의 실시설계를 맡은 서울국토청은 지난달 29일 가평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당시 설명회는 노선안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파행을 빚었으며 '공사 중지 가져본 신청'에 나설 수 있다는 주민 반응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경기 간 노선 갈등은 제2경춘국도 지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착공에 또다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2019년 예타 면제 이후 서울~춘천 최단 거리 관통을 희망하는 춘천과 도심 통과를 요구하는 가평의 노선안이 달라 이를 조율하는 데 1년10개월을 허비, 사업비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

원주국토청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및 착공을 위해)사업비 증액이 가장 큰 관건으로 강원도와 함께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며 "증액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제2경춘국도가 수도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광역교통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江原日報

2023 07 05 ()

01

道, 교부세 1,307억 감소 전망 재정자립도 낮은 시·군 직격탄

경기 침체로 국세 수입 줄어
홍천 감소액 전국 郡서 2번째

경기 침체로 국세 수입이 줄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 받는 교부세 역시 최대 1,307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타격이 커 춘천, 삼척, 홍천, 인제 등은 교부세 감소 규모가 전국 상위권에 속했다.

지자체 예산분석 전문 민간싱크탱크인 나라살림연구소는 국세 수입 진도를 기준으로 올해 받게 될 강원자치도의 보통교부세 규모가 지난해보다 1,30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 침체로 올 5월 말 법인세 등 자산 관련 국세가 36조원 덜 걷히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정률 분교부세 역시 7조원가량 줄어든 영향이다.

국세 수입을 5월 누계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도내 교부세 감소액은 1,203억원으로 예상됐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지자체에서 교부세 감소에 따른 타격이 컸다.

2023년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 (단위: 백만원)

지자체	감소액①	감소액②
강원	-120,380	-130,736
춘천	-54,893	-59,615
원주	-52,223	-56,716
강릉	-52,236	-56,730
동해	-18,450	-20,037
태백	-18,519	-20,112
속초	-14,708	-15,973
삼척	-44,867	-48,726
홍천	-43,503	-47,245
횡성	-29,746	-32,304
영월	-26,359	-28,626
평창	-32,798	-35,620
정선	-26,684	-28,979
철원	-30,376	-32,989
화천	-23,486	-25,506
양구	-19,620	-21,308
인제	-32,892	-35,721
고성	-18,320	-19,896
양양	-17,637	-19,154

① 5월까지 누계 감소액 기준 ② 전년 동기 진도를 반영한 감소액 기준
자료: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춘천의 교부세 감소 규모는 548억~596억원으로 전국 시 단위 지역 중 8위에 올랐다. 군 단위 지역에서는 홍천의 교부세가 435억~472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국 군 지역 중 전남 해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인제는 교부세 감소 규모가 328억~357억원에 달해 전국 8위를 차지했다. 강동희기자

2면에 계속

2023 07 05 ()
02

江原日報

道 올해 교부세 1,307억 감소 전망 -1면에서 계속

삼척의 경우 교부세 감소액은 448억~487억원 규모로 시의 자주재원 중 12.4%를 차지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비중이 컸다.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주재원 중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감소 규모가 클수록 해당 지자체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도 커진다.

다만 이같은 교부세 감소는 5월말 기준 세수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 추정했기 때문에 하반기 국세수입이 늘어나면 감소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보통교부세 감소가 시 지역보다 예산 규모가 적은 군 단위 지역

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 07 05 ()
04

강원도민일보

여전히 남아있는 '석면 학교'...도교육청 관리부실 비판

지난 겨울 전면 제거 약속 불수
울 여름방학 진행 32곳 확인
교육당국 기준 미흡에 혼란도
도교육청 “여름방학 제거 완료”

속보=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해 겨울방학까지 학교 현장에서 모든 석면을 제거하겠다고 약속(본지 2022년 8월 26일 4면)했으나 아직까지 도내 일부 학교에 석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은 열에 대한 높은 저항성 덕분에 건축자재로 사용됐으나 1급 발암물질로 지정, 지난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금지됐다. 장기간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4일 본지 취재결과 당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겨울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석면을 모두 제거할 계획이

었으나 아직까지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가 확인됐다. 본지가 확인한 '2023학년도 여름방학 석면 해체·제거 예정학교명단'을 보면 대상 학교는 32곳이다. 지역별로는 강릉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9), 원주(7), 홍천·인제(2), 삼척·영월(1) 순이었다.

일부 학교는 실제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거나 사용빈도가 적은 창고, 구식 진장소 등에 한해 석면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학생들이 장시간 머무르는 교실 등에서도 아직 석면이 남아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원주 A초교는 이번 여름방학 중으로 교실 2곳과 교장실 등에 남아있는 석면을 제거할 계획이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다른 시설은 지난 2016년쯤 석면 제거가 이뤄졌는데 여에서 일부분만 남아있던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교육당국이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뒤늦게 추가 석면 제거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다. 춘천 B초교는 지난해

‘없어도 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받았던 승강기 앞 석면에 대해 올해 다시 없애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다. B초교 교장은 “당시 점검 과정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들어 다른 시설의 석면을 없앨 때 같이 없애지 않았는데 다시 제거 하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춘천 C고교 실습시설 일부, 강릉 D고교 방송실·음악실, 춘천 E고교 체육시설 창고 등에 남아있는 석면도 이번 여름방학 중으로 해체·제거될 예정이다.

당초 교육당국이 약속했던 겨울방학보다 시기가 밀렸고, 이 과정에서 관리부실 문제 등도 확인되자 교육청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교 개축 및 통폐합 등으로 인해 지난 겨울방학 중 석면 제거가 완료되지 못했다”면서 “석면 제거가 완료되지 않은 학교는 올해 여름방학을 이용해 해체 및 제거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동해항에 컨테이너선 정기항로 개설

동해항에 컨테이너선 국제정기항로가 개설될 예정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심규언 동해시장, 백승고 동영해운㈜ 대표이사, 홍영우 ㈜용문글로벌포트 대표이사는 4일 도청에서 ‘동해항 컨테이너 국제정기항로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선사와 하역사는 수출입 물동량 창출로 정기항로의 조기 활성화와 안정적인 하역능력을 확보하고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역물품 우선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강원

도·동해시 업무협약 체결 수출입 물동량 창출 비롯 지역인재 채용 등 협력기로

도와 동해시는 행·재정적 지원과 안정적인 항로 운항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한다.

선사는 1단계로 이달 중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동해~부산을 잇는 정기항로 취항을 시작으로 물동량 증가 추이에 따라 선박을 추가 투입한다. 또 러시아 연해주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로 시장을 확장하는 등 동해항을 거점으로 글로벌시장

을 단계적으로 확대·개척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해시는 과거에도 동해항 컨테이너선 취항을 추진했지만 하역 인프라 미비와 수출입 물동량 부족으로 인해 두 차례 정기항로가 중단됐다. 시는 이 같은 실패를 거울 삼아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동해항은 2021년 하버크레인도 입돼 컨테이너 하역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동해시는 동해항을 이용하는 여러 기업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항만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시장에 유통망과 컨테이너터미널을 보유한 러시아 기업과의 협약 체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오랜 숙원사업이던 동해항 컨테이너선 취항을 계기로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이끌어 내는 일들을 만들고 벌크 화물 위주로 운영되던 동해항이 복합물류 거점항만으로 거듭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동해항은 강원특별법 개정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도약할 기회를 얻었으며 이번 항로 개설로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다.

동해=정익기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7 05 ()

05

동해안 미개장 해변 수난사고 속출 시·군 안전요원 배치

양양서 물놀이 사망사고 2건 발생

속초시 상어 차단 안전그물 설치

강릉을 시작으로 동해안 해수욕장이 잇따라 개장하는 가운데 미개장 해변을 중심으로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게다가 동해안 일대에서 상어도 잇달아 발견되면서 지자체는 시민 안전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방당국과 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52분쯤 양양하광정리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30대 여성이 바다에 빠져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해변 바위에 있던 해당 여성을 구조했다. 같은날 오후 3시 3분쯤 망상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부자가 파도에 떠밀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해안가에서 약 100m 떨어진 위치에서 이들 부자를 구조했다.

미개장해수욕장 사고는 지난달부터 속출하고 있다. 4일 기준 개장한 해수욕장은 강릉 경포해수욕장 1곳뿐이고 나머지 85곳의 해수욕장은 미개장 상태로,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곳이

많은 안전 사고에 취약한 실정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7월 3일까지 강원도내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는 16건으로 그 중 3명이 숨졌다. 갑작스러운 폭염으로 지난 주말 미개장 해수욕장으로 피서객이 몰리면서 양양에서 몽골 국적의 50대 남성 숨지는 등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고가 속출하자 각 지자체도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잇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양양은 오는 7일 개장을 앞두고 낙산해수욕장에 수상안전요원 7명을 배치했다. 같은날 개장하는 삼척·맹방해수욕장 2곳에도 4명씩 8명의 수상안전요원이 근무한다.

오는 12일 문을 여는 고성군은 이번 주부터 미개장 해수욕장 10곳에 안전관

리요원 40명을 배치한다. 속초도 오는 8일 개장을 앞두고 속초해수욕장과 외웅치해수욕장에 안전 요원을 두기로 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백상아리 사체도 동해안 일대에서 잇달아 발견돼 지자체는 비상이 걸렸다. 속초시는 오는 8일 개장을 앞두고 해수욕장 방문객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3일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강화에 나서고 있다.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속초항 인근 해역에서 악상어 사체, 장사항 인근 해역에서 백상아리 사체가 각각 발견됐다. 속초시는 해수욕객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속초해수욕장 600m 전 구역에 그물망을 설치해 상어 진입을 차단했다. 박주석·신재훈

강원도민일보

2023 07 05 ()

/ 19

한국형 자치분권 모델 만들어야

-강원 제주 세종 전북 '특별자치 원팀' 협력 기대

특별자치제도의 성공적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특별광역자치단체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강원을 포함한 제주, 세종 3개 특별자치시도와 내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도는 물론, 이들 4개 지역의 연대는 의미가 큼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모색하는 동시에, 분권 시대를 열어나가는 역사적 소명을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4개 지자체는 이날 만남에서 협력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지사 등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해 열의를 보였습니다. 김 지사는 “우리 특별자치시도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진정한 분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자치분권 모델을 새롭게 창출해 낼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해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협약의 내용은 자치 권한 강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지방정부의 헌법 개정 관련 협력은 물론,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에 힘을 모으기

로 했습니다. 특히 특별지방정부의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 협력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평가됩니다. 국세 이양 등 특별지방정부의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방안 추진도 자치 분권의 요체로 판단됩니다. 정부 권한의 포괄적 이양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더욱이 특별자치시도 협의회 구성과 사무국을 설치 결정은,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연대와 협력을 기대하게 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각 특별자치 시도 의지향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광역시도의 특성에 맞게 산업을 성장시키고, 특례를 활용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랫동안 개발을 저해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재산권을 보호할 과제가 있습니다. 제주와 세종, 전북도 자치 권한을 강화해 경제와 문화를 부흥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책의 목표와 방식이 다를지라도, 자치 권한을 강화해 분권의 범위와 힘을 키우는 데에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중앙 일방의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 지역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의 연대와 협력은 한국 지방자치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7 05 ()

/ 19

피서철 안전사고 충분한 예방책을

-해수욕장 및 계곡 물놀이 인명피해 없어야

여름 피서지 1위로 꼽힌 동해안 해수욕장이 7월 1일 개장해 첫 주말을 보내면서 인파가 몰렸다는 소식입니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개장 시기가 1주일 정도 빨라졌습니다. 아직 개장하지 않은 해수욕장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지 않은 백사장도 있기 때문에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수욕객이 몰리는 여름철은 연안 안전사고 발생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는 때입니다.

7월 3일 망상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튜브를 타다가 파도에 떠밀린 2명이 구조됐습니다. 7월 1일과 2일에는 삼척 덕산해변과 동해 노변해변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했으며 다행히 구조됐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를 피해 청정한 휴양지를 찾는 발길은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강과 계곡, 산림 등 곳곳에 걸쳐 있습니다. 유명한 피서지를 비롯해 그렇지 않은 곳까지 안전 조치가 충분한지 세심하게 살펴 조치해야 합니다. 해상이든 계곡이든 물놀이에는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이며, 긴급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예방책이 충분해야 합니다.

특히 관광객 유치를 겨냥해 해수욕장별로 수제맥주축제와 해변음악축

제, 해양레저스포츠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돼 있어 백사장 일원에 인파가 더 몰리게 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야간입수를 허용하는 곳도 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더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론 인명구조대 등을 투입한다고는 하지만, 낮 시간대보다는 취약하므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앞서 해양경찰 측에서는 해수욕장 개폐장을 전후한 기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관심' 단계로 발동했으며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관심'에서 '주의보' '경고'로 상향되므로 위험성에 따른 정보를 주민과 관광객이 분명히 인지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해수욕장 폐장하는 8월 하순까지 예방과 즉각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관련 기관 부서간 공조가 철저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피서객 맞이에 나선 지역에서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 의무화와 숙박요금 피크제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 행위가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관광객 인명 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날씨 변동에 따른 위험요소가 상존할 때가 여름철이고, 낯선 환경에서 피서객 대응이 원활하도록 안전점검은 반복되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 07 05 ()

/ 19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성과를 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제주·세종·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에서 서로 손을 잡고 특별지방정부의 위상 제고를 위한 헌법 개정 및 국정과제 추진, 특별법 개정 등에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또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및 포괄적 권한 이양 방안 모색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공동 추진하며 국·과장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모두 독특한 컬러를 갖고 있다. 4개 시·도는 일반적으로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개 시·도는 경쟁자로서의 관계를 뛰어넘어 호혜·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4개 시·도의 국·과장급 정례 회의를 통해 공동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인식과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즉, 경쟁과 독존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생산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4개 시·도의 인적 자원과 노하우가 상호 교류로 자체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사회에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4개 시·도 스스로의 인식 전환과 판단이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즉, 4개 시·도는 상

호 연대로 특별자치시·도의 실익을 더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특별자치시·도의 특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또 새로운 특례를 어떤 방법으로 발굴해 나갈 것인지, 조례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해결해야 할 부문이 산적해 있다. 조례는 특별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를 잘 만들어야 특별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현안들은 4개 시·도의 경험 이 공유될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강원자치도는 특례의 적용 기준과 방법을 담게 되는 31개의 조례 제정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올 5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6월8일부터 각종 특례가 시행된다. 강원특별법에는 ‘도

강원·제주·세종·전북, 연대·협력하기로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권한 이양 공동 대응

중앙정부 상대 이해·설득시키는 논리 개발을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이 56차례나 등장한다. 새로 조례를 만들어야 할 특례만 31개에 달해 방대한 작업이다. 현재 강원특별법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 규제 완화, 정부와의 인사 교류 등의 특례가 담겨 있지만 적용 범위와 기준 등을 정하는 시행령과 조례가 없다. 제주와 세종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4개 특별자치시·도가 손을 잡고 연대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힘을 합쳐야 할 때다. 특별자치시·도의 성패는 한마디로 중앙정부 권한을 지역으로 얼마만큼 가져오느냐에 달려 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중앙정부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논리 개발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江原日報

2023 07 05 ()

/ 19

여행 만족도 4위 그친 강원관광, 경쟁력 강화해야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해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내 여행지에서 경기도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특히 숙박여행에서 강세를 보였다. 도는 국내 숙박여행 횟수 2,171만회를 기록,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0만회 이상 수치를 나타냈다. 2위인 제주(1,338만회)와 비교하더라도 800만회 이상 차이 나는 압도적 1위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도는 40대(22.3%), 3인 이상 가구(72%),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42.4%) 숙박 관광객들에게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높은 인기와 달리 물가 및 관광지 혼잡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며 여행 만족도는 전국 4위에 그쳤다. 제주, 전남, 부산에 뒤졌다. 물가와 관광지 혼잡도의 영향이 컸다. 기념품 등 쇼핑 관련 만족도도 하위권이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관광자원의 경쟁력이 뛰어나도 '다시 찾고 싶은 강원자치도'에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관광산업은 여행객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 개발 등 경영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 천혜의 관광자원만으로 어필하기는 힘들다. 특히 무질서·바가지요금 없는 '청정 국민관광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 불가능하다. 스스로 주인의식을 발휘할 때 비로소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고 해도 관광지가 혼잡하고 바가지 상하이 난무한다면 아무도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축제나 콘서트 위주 등의 이벤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제대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강원관광으로 도약하기 위한 각오와 노력이 더없이 절실한 때다.

관광은 다양한 분야가 결합한 '융복합산업'이다. 강원관광은 겨우 숙박만 충족됐을 뿐이다.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부족하고 즐길 거리는 더 찾기 어려워 만족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다. 콘텐츠는 풍부하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미흡하면 관광산업은 언제든지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여행객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법이다. 즐길 거리, 먹거리, 교통, 편의시설 등 각종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여행객의 만족도가 커지면 새로운 시장인 위케이션 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에 더해 관광상품 개발,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강원관광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 등도 이룰 수 있다.